



큰절하는 이재명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안내견 체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책 간담회 심상정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방문한 안철수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국민의당 대전시장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딩 배우는 김동연 김동연 대선후보가 19일 강남구 코딩교육기업 엘리스를 찾아 코딩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2030 잡아라”...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을 화두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개 속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대 유권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

이, 법제화 강조... 건전한 생태계 구축

윤 “비과세 등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

행보와 연관시켜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특

히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정책은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권력분산 4년 중임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칙적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선호 정도만 밝혀 온 이 후보가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나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리 어려운 일일지 모르나”면서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20년 취임 이후 꾸준히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정 전 총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함으로써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같은 발언이 개헌 이슈의 전면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개헌은 이슈의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식사비 3만→5만원

김병욱,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에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vs 윤 TV토론회 ‘설연휴’ 열리나

“31일 또는 30일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회를 설 연휴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31일, 2안은 30일이다.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명절 연휴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회콘텐츠 단장과 국민의힘 측 TV토론회 실무협상단인 성일중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 요청하는 것”이라며 “민약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TV토론회를 설 연휴 기간에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31일(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에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전날 설연휴 전인 27일 개최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주)백양실업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